

# 한국 민족주의의 쟁점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에 대한  
자존의 변명

윤대식

한국의국어대학교 강사, 동양정치사상 전공  
dskhan@hanmail.net

- I. 머리말
- II. 민족, 동포, 우리, 그리고 민족주의
- III.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적이었는가?
- IV. 민족주의자의 민족과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의 출발?
- V. 맺음말

## I. 머리말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sup>1)</sup>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강요로까지 받아들여진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물론 세계화의 추세가 특정 정부가 고안해낸 정책적 산물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공고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에 따른 외부 압력이었지만<sup>2)</sup>, 그 반대로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더 이상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수 없는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형해화되었다. 사실 세계화와 대척에 놓인 개념은 민족주의가 아닌 지역화(localization)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개념이 세계화라는 확장된 공간에 적용되었을 경우 민족의 개별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오도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 개념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으로서 일도성(一度性)<sup>3)</sup>을 부각시키기보다 세계 체제의 일원으로서 '다양성'<sup>4)</sup>으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 1) 민족주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리'라는 범주와의 관계성을 지나치게 폐쇄적 또는 국수주의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김영명은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이것이 개인주의의 부족과 대외적 개방성의 부족을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식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 난점이 있지만 '우리'라는 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영명, 「우리 정치학 실천의 방안: 문제와 국제정치학의 예」, 『정신문화연구』 26권 1호(2003), 4쪽.
- 2) 세계화라는 용어 사용은 1960-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소련과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본격화되었다. 김영명은 2002년 현재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와 함께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일국 패권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의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오름, 2002), 19-20쪽.
- 3) 일도성의 의미는 개별 국가 역사의 특수성을 가리킨다. 해방 정국에서 통합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의 해법으로 안재홍이 『한민족의 기본진로』에서 제기한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의 요구는 '역사는 노출되는 면이 본질적으로 복잡다양한 데서 다양성이란 것이 있고, 반드시 한 번으로 국한되는 특수성이 있기에 일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행상존'하기 때문에 보편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동시에 일체 식민통치 경험을 지닌 한국만의 특수한 역사조건하에서 국민국가 건설이 시급한 과제를 강조했다. 안재홍, 『한민족의 기본진로』(조양사, 1949), 37쪽.
- 4) 다양성의 수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정부와 시민사회 부문 모두 강조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정책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주의 자체가 '정치적' 결과일 수 있다. 마이클 왈쩌(Michael Waltzer)는 동일성(정체성)과 차이의 정치로 명명된 정치방식은 문화적 요구들 사이의 타협이며 통상적으로 오래된 불평등 때문에 생겨난 해묵은 공포와 원한이 작동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왈쩌는 이 문제를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입장과 달리 불평등이 실제로 문화와 공동체에 뿌리박고 있으며 공동체적 방식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물론 ‘민족적’ 요소가 보편성과 공존할 수 없는 독자성을 내포한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민족적’ 요소를 내포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는 양가적이다. 즉, 민족주의는 세계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과 같이 새롭게 발굴해야 할 단서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민족주의를 세계화 속에 융합(fusion)함으로써 통섭(consilience)의 실천으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으로 나뉜다.<sup>5)</sup>

그렇다 할지라도 민족주의가 여전히 거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좁게는 ‘민족의 개념과 범주가 보편적이기 보다 여전히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를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방법론이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서구의 이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sup>6)</sup> 만약 민족과 민족주의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가치를 담보하기에 현재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낡고 진부한 것이라면, 그 내부에 작동하는 낡고 진부한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고, 반면 민족주의에도 보편성이 내재했다면 그 보편성의 표출양태가 어떤 것인지를 추출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 민족주의에 내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그 원래의 용어와

지적하고, 소수 집단에 대한 존중과 관용, 지원에 따른 대가가 전체주의적 통합의 강요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관용에 따른 타협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타협을 통한 만족은 완전한 것이 아닌 불만의 요소를 내포하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왈찌, 김용환 · 박정순 · 윤형식 · 정원섭 옮김, 『자유주의를 넘어서』(철학과 현실, 2001), 172-196쪽.

- 5)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은 사회과학의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된 배경으로 문화인류학에서 제기된 문화상대주의를 거론한다. 윌슨은 모든 문화가 상이한 방식으로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소수 인종, 여성,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하위문화 역시 다수자들의 하위문화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이 정치적 다문화주의를 결과했다고 지적한다. 즉, 정체성 심리학이 생물학 · 심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결과를 부정하고 유전에 기초한 통합된 인간본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윌슨은 만약 문화나 유전이 아니라면 인간성을 통합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윤리기준들이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문화가 끝없이 다양하고 동등하다면 무슨 근거로 신정(theocracy), 식민주의, 아동착취, 고문, 노예제도를 반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 장대익 옮김, 『통섭』(사이언스북스, 2005), 322-324쪽.
- 6) 민족주의의 과제들이 세계화 개혁과 개인의 자유 구현에 방해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이유는 영·미의 민족주의 비판론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와 인권을 핵심적 가치로 채택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을 비판하면서 탈근대적 철학 배경에서 문화영역에 관심을 지닌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민족주의가 대내외적인 억압과 폐쇄성, 국제분쟁 유발 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비판론의 대표적 사례로는 복거일의 영어 공영론, 임지현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비판, 권혁범의 생태주의적 민족주의 비판을 거론할 수 있다.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계간 사상』 50호(2001), 257-259쪽.

수사(修辭)를 통해 정의하고, 한국 민족주의가 개화기부터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이르기까지 인식과 실천에서 이중적인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현재 한국 정치에서 민족주의를 양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명개화-위정척사-일제 민족주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상적·실천적 지식인으로 유길준-유인석-안재홍을 선별하여 각자의 민족주의론에 내재한 일관된 흐름으로써 그 이중성을 추출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적 접근인 동시에 역사적 접근방식이 간과하고 있는 사상적·정치적 의미의 재조명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 II. 민족, 동포, 우리 그리고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어떤 것일까? 영어 ‘nation’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 민족, 국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내포한다. 개념사의 맥락에서 nation은 주권을 지닌 정치공동체의 경계선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다.<sup>7)</sup> 이와 같이 주권체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nation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nation의 고유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출현과 함께 등장하는 민족주의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즉, 근대에 들어서 중세적 신앙과 종교적 신비주의로부터 주권의 근거를 독립시켰다면, 민족주의는 세속화된 국민국가에 신성성을 부여하여 초역사적 실체로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사실이

7) 그린펠트(L. Greenfeld)의 개념 변천사에 따르면 nation의 라틴어 어원인 natio는 출생과 관련되어 로마 시민보다는 낮은 같은 지역 출신의 외국인을 가리켰고, 중세에는 대학에서 같은 지역 출신의 학생 집단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점차 지역성을 넘어서 공통의 의식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의견공동체의 의미를 띠었다고 한다. 13세기 이후 유럽의 공회회에서 의미변화를 겪는데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권위를 지닌 대표자들의 모임이나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엘리트’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16세기 영국에서 일반주민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people과 유사한 말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 의미전환이 근대적 의미의 nation 개념 출현의 첫 계기로 파악되는데, nation = elite = people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주권적 주체로서 nation 개념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박명규는 이러한 의미변천 과정이 유럽의 사회·정치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명확한 지리적 경계와 정치적 주권을 갖는 국민국가체제가 세계질서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과 nation 개념의 부각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한국개념사총서』(소화, 2011) 참조.

다.<sup>8)</sup> 물론 nation에 내포된 다의적 요소들, 즉 민족·국민·국가·인민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혼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서구에서도 근대 주권국가 출현에 따라 국민, 민족, 인민을 주권원리로 채택했던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9)</sup>

그렇다면 nation의 다의성을 번역·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족·국민·인민 등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게 된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周禮』(春官·墓大夫)편에 ‘민(民)’과 ‘족(族)’의 용례가 제시되는데, “묘대부는 무릇 나라 안의 묘가 있는 지역의 관도를 관장하고 나라의 민과 족에게 명령하고 금지와 명령을 관장한다”<sup>10)</sup>는 내용에서 ‘민’과 ‘족’은 ‘민족’이라는 복합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독립적인 용어이자 지배자의 명령에 따르는 피동적인 객체, 즉 신민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근대 서구의 개념으로 nation이 민족·국민·인민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관념과 용어 사용의 선례가 이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百姓·民·國人·人’으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용어에 내포된 차별적 의미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사례로 조기빈(趙紀彬)은 그의 저서 『反논어』(원제: 論語新探)에서 인과 민은 춘추시대 상호 대립했던 두 계급을 가리키며 착취-피착취 관계이자 통치-피통치의 관계였음을 분석하면서 인과 민이 원래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두 대립계급을 지칭하기에 인민 또는 민인(民人)의 합성어가 사용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sup>11)</sup>

물론 조기빈의 분석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춘추시대까지 국민(國人)이 지배계층 거주지인 국(國)이라는 경계 내의 구성원인 반면 서인(庶人), 민(民)이 피지배계층으로 구별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史記』〈周本紀〉의 “여왕이 포악하고 사치하며 교만했으므로 국민들이 왕을 비방했다. 소공이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간언하자 왕이 노하여 위나라 무당을 들여 비방하는 자를 감시하게 하고 보고하

8) 쟈네틀레는 정치의 신성화 테제가 기독교와 같은 상징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 특히 라인 강 동쪽이나 남부 유럽의 경험에서 도출된 논리로서 시민적 전통이 강하거나 약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황직,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1권 (2011), 108-109쪽.

9) 김효전, 「헌법」, 『한국개념사총서』(소화, 2011) 참조.

10) 『周禮』(春官·墓大夫). “墓大夫, 掌凡邦墓之地域爲之圖. 令國民族葬而掌其禁令.”

11) 조기빈 저, 조남호·신정근 옮김, 『反논어』(예문서원, 1996), 39-40쪽.

면 죽어버렸다 [...] 삼십사 년 왕이 더욱 엄하게 하자 국민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길에서도 눈으로 말했다”<sup>12)</sup>는 기사는 왕과 국민의 대립, 왕과 민의 명령과 복종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왕의 포악함, 사치, 교만함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자가 과연 누구일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즉, 국민은 최소한 일방적인 명령-복종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신분임을 반영한다. 따라서 왕과 국민의 대립은 통치계층 내부의 균열을 의미하며, 국민들이 서로 함께 모반하여 왕을 습격함으로써(相與畔, 襄厲王) 축출했다는 결과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정치적 위상과 역량이 단순히 피통치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한편 족(族)의 의미는 예제(禮制)의 운영과 맞물린다. 즉, “족이란 것은 모이다 또는 모여드는 것으로 은혜와 사랑이 서로 넘쳐 모이는 것이다. 살아서는 서로 친애하고 죽어서는 서로 애통해한다. 모이고 모여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족이라고 말한다”<sup>13)</sup>는 『白虎通義』(宗族)의 설명에서 보자면 혈연에 기초한 친친(親親)의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이로부터 전체 구성원을 지칭하는 구족(九族)의 용어가 파생하는데, 정명(正名)을 정치적 이상상으로 설정한 유가의 인식으로부터 ‘족’은 자신들의 혈연 공동체, 특히 부계의 내부 구성원(‘內宗日族’, 『爾雅』)을 지칭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승인의 지표로 제시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계와 처족을 당(黨)으로 구별하고 동족(同族)과 다른 이족(異族)으로 구별한다는 점에서도 동성(同姓)의 구성원만을 지칭하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자면 ‘족’은 계급적 차별성을 사회적 차별성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과 민이 계급적 차별성을 지닌 용어로서 국민과 서인, 왕과 민의 구별만큼 민과 족이 어떻게 합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별개로, 민족의 합성어는 정치적·사회적 차별성의 장벽을 극복한 보다 포괄적인 공동체 개념으로 제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합성기원의 파편적 단서는 이미 『尙書』(堯典)에서도 제시되었다. “옛 요임금에 대하여 상고해 보건대 [...] 큰 덕을 밝혀 구족을 화목하게 했고, 구족이 화목하자 백성을 고루 밝게 했으며, 백성을 고루 밝게 함으로써 만방을

12) 『史記』〈周本紀〉. “王行暴虐侈傲, 國人謗王. 召公諫曰, 民不堪命矣. 王怒, 得衛巫, 使監謗者, 以告則殺之 [...] 三十四年, 王益嚴, 國人莫敢言, 道路以目.”

13) 『白虎通義』〈宗族〉. “族者, 湊也, 聚也. 謂恩愛相流, 湊也. 生相親愛, 死相哀痛, 有會聚之道, 故謂之族.”

평화롭게 했다. 백성들이 이에 변화하여 평화를 누렸다”<sup>14)</sup>는 기사는 통치자의 성공 여부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진 주변 혈연 집단의 질서를 유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질서의 범위가 백성으로까지 점진적인 확대를 가져온다는 유가적 이상상을 반영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유가적 이상상을 반영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또한 현실에서 ‘족’과 ‘민’이 태생적으로 이질적인 타자적 존재였지만, 오히려 통치자에게 ‘족’과 ‘민’은 모두 신민으로 포용해야 할 상동(相同)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는 당위성을 반영한다.

만약 상기한 ‘족’과 ‘민’ 개념의 동아시아 고대의 원형적 단서를 전제할 수 있다면, ‘민족’의 합성에 이미 동질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안전장치임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과 ‘족’이 지닌 정치적 차별의 내재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동질성과 포용의 용어로서 ‘민족’을 만들어 적용할 수 없었다면, 어떤 용어로 신민 모두가 동질적인 존재임을 각인시켜 통합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는 17세기 동아시아 근대성<sup>15)</sup>의 내재적 발전을 대표하는 실학의 대표적 인물인 고염무의 인식에서 드러난다. 그는 “백성은 나와 같은 형제(民, 吾同胞)”라는 장재(張載)의 『西銘』을 전거로 삼아 “오늘날의 백성은 나를 포함하여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요, 백성을 구제하지는 말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sup>16)</sup>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고대인(人)/민(民), 족(族)/민(民)으로 차별화했던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기 위해 ‘동포’라는 용어 사용의 사례를 제기했다.<sup>17)</sup>

14) 『尙書』〈堯典〉. “昔在帝堯 [···]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15) 이혜경은 담사동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고염무가 여전히 전통적인 유가적 질서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고염무의 학문체계가 군주권한과 윤상을 중시했는데, 이로 인해 제도 밖에서 정치를 비판했던 사대부들의 공리공담을 명 멸망의 원인으로 판단했고, 실학으로서 경학을 강조하는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염무를 통해 외유내법의 특징을 지닌 중국정치의 고유성이 확인되며, 형이상학적 틀 뒤의 유가의 현실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문학과 지성사, 2002), 27-49쪽.

16) 『日知錄』卷19, 「直言」. “張子有云, 民, 吾同胞. 今日之民, 吾與達而在上位者之所共也. 救民以事, 此達而在上位者之責也. 救民以言, 此亦窮而在下位者之責也.”

17) 동포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쑨원(孫文)의 《救國之急務》에 나오는 “사해 모든 동포여! 우리 민족을 구하는 것은 오직 두 길이 있을 뿐(四萬萬同胞乎! 救吾民國, 惟有兩途.)”이라는 내용과 마오쩌둥(毛澤東)의 『中國人民大團結萬歲』에 나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상하귀천의 차별성을 아우르는 기제가 단순히 동질성에 대한 정서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책무라는 고임무의 지적이다. 동포 또는 민족이 지닌 태생적 출발점으로서 혈연의 관계성은 정치주체 간 상호 책무의 이행이라는 쌍무적 관계성으로 전환됨으로써 거꾸로 감성과 정서의 동질성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 결과물인 셈이다.

반면 한국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미로 동질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민족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민족이라는 용어 그 자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족(族)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통치의 대상인 민(民)과 별개로 사용되었다. 세종 치세부터 족의 용례가 타 민족과의 차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족의 의미와 달리, 세종 즉위 직후(1년) 박은과 허조의 상계에서 “섬에 있는 왜구는 우리 족속이 아니기에 마땅히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에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깊고 궁벽한 곳에 나누어 두어야 한다”<sup>18)</sup>는 건의나 세종 16년 파저강 여진의 귀순과 왕래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제 그들을 토벌한 후에 귀순해 오니 예의상 후하게 대해야 마땅하나 우리 족속이 아니라서 그 마음이 반드시 검은 면이 있을 것이니 어찌 귀순하는 마음만을 믿고 출입의 방지를 엄중히 하지 않겠는가?”<sup>19)</sup>라고 계고하는 세종의 모습에서 족류(族類)의 의미가 조선의 정치적 경계와 권위를 기준으로 그 경계와 권위 내에 있는 구성원에 한정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 용례가 조선의 정치적 경계, 즉 국가 내 정치권위와의 관계성에 기초한 동일한 구성원만을 국민(國人)으로, 그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한 구성원을 야인(野人)으로 구별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불어 문화적 차별성까지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민족의 구성요소인 혈연, 운명(정치) 공동체적 요소뿐 아니라 문화 공동체적 요소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근대 민족주의의 출현에 따라서 비로소 민족이 형성되고 주체화된다는 점에서 한국역사에서 현재의 민족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04년을 기점으로 한다.<sup>20)</sup> 1904년 러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한일의정서

오는 “전국의 동포들이여 우리들은 응당 진일보한 조직으로 일어설 것이다(全國同胞們, 我們應當進一步組織起來)”라는 선언 등은 대등하고 동질적인 정치주체로의 인민보다 더 근원적인 용어로 동포를 사용한다. www.baidu.com 참조.

18) 『世宗實錄』 1年 7月 6日 己酉.

19) 『世宗實錄』 16年 1月 12日 庚寅.

채택 강요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통해 통감부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했다. 물론 당시 황인종을 대표해서 백인종의 침략으로부터 동양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인종론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일본의 승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의견이 존재했다.<sup>21)</sup> 그것은 구미 열강들 사이에 퍼져 있던 러시아 남하론과 만주·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러일 간 갈등에 따른 일본의 적개심, 자신들의 조기지지에 러시아의 진출을 우려했던 청의 전통적인 러시아 적개심 등 19세기 후반 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사상적 회로로 인해 편향된 지식과 정보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sup>22)</sup>

비록 러일전쟁이 동양평화를 위해 백인종의 위협으로부터 황인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일본은 보호국이라는 명분하에 한국 지배를 현실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식민(植民)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sup>23)</sup> 바로 이 시점부터 '민족'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 또는 부응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1907년 법무대신 조중응은 평리원의 질품서를 검토한 뒤에 검사에 기소된 피고들이 1905년 을사늑약의 오적인 이지용·이근택·박제순·이완용·권중현을 “彼五賊李址鎔·李根澤·朴齊純·李完用·權重顯이 擅書可字而許之 何야 內治政權과 全國利權을 竝爲讓與 何야 驅二千萬民族 何야 作人奴隸”<sup>24)</sup>하기 에 이들을 처단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품신하고 형 집행을 고종에게 요구한 내용이나 1909년 일진회 이용구가 한일병합성명서를 발표하면서 “自來我韓은 專制政治로 人民의 權利를 束縛 何고 不敢自由 何 民族인 故로

20) 이황직, 앞의 논문, 112쪽.

21) 대표적으로 천도교의 손병희는 러일전쟁의 가능성을 예단하고 일본의 승리가 대한제국 내 친러파를 축출하는 데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친일망명객과 제휴하고, 일본 군부와 협력관계를 논의하여 일본의 원조를 받아 무력을 통해서라도 친러파를 제거한 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조직을 목표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고종은 러시아의 승리와 의존을 기대했는데, 이것은 일본 견제를 위한 친러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되면서 고종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호소이기도 했다. 이용창, 「한말 손병희의 동향과 ‘천도교단체인운동’」, 『중앙사학』 15집(중앙대학교, 2001), 66-69쪽.

22) 최규진, 「러일전쟁 전후 한국인의 러시아 이미지 형성 경로와 러시아 인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19(경상대학교, 2010), 215-216쪽.

23) 함동주,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식민론과 식민주의적 문명론」, 『동양사학연구』 94집(2006), 184-185쪽.

24) 『高宗實錄』 44年 7月 6日(양력).

其自取호 責任은 擔任호았다호여도 可호나, 過去를 推호고 將來를 思호면 安危存亡을 決호 民族의 責任에 歸호한다고 謂호치 못호지리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 세계 일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實一超而上新大帝國世界一等民族之列)”임을 기대하기에 상소한다는 내용에서 현재와 같은 ‘민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sup>25)</sup>

그렇게 보자면 한국의 민족 개념은 1904-1905년을 기점으로 ‘민족의 위기극복’을 시급한 과제로 채택한 운동과정에서 돌출되었으며<sup>26)</sup>,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 모두에게 ‘민족’의 담론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sup>27)</sup> 예를 들어, 유길준에게도 보이듯이 군주의 전제정치를 “그 나라 안의 법률과 정령의 일절 대권이 모두 그 군주 한 사람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에 그 군주의 권력은 한정이 없고 그 행동하는 바가 정령과 법률이 되어 인명의 생활과 백성의 재산의 침탈 여부가 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것 [...] 치국하는 도에 가장 불공정한”<sup>28)</sup> 군주가 천단(擅斷)하는 정체로 규정함으로써 군주권위의 무한성과 토지인민의 사유(私有)에 기초해서 정리를 위반하고 공도를 배반하는 통치행위로 이해했던 이 시기 지식인과 통치계층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일본에 의한 식민주의적 문명개화는 ‘민족’ 개념에 정치적 주체성을 부여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 III.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적이었는가?

#### 1. 기원(起源)의 이중성

한국 민족주의의 출발이 민족의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면서

25) 『純宗實錄』 2年 12月 4日(양력).

26) 이황직, 앞의 논문, 113쪽.

27) 김영명은 ‘우리’라는 말이 한국 민족주의의 강성을 표출하는 용어로 민족주의의 과잉에 따른 결과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오히려 민족주의의 허약함이 가져온 결과로 분석한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이념, 정책, 제도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대중의 정념으로만 존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민족주의의 허약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한 민족정서가 형성되고, 정치적 자부와 문화적 주체성을 이루지 못해 정서적인 ‘우리 의식’으로 상쇄하려는 정체성의 본능작용이라는 것이다. 김영명, 「탈민족주의론 비판과 열린 민족주의의 모색」, 『한민족연구』 12호(2012), 22-23쪽.

28)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I』, 「政府의 種類」(일조각, 1996), 163쪽.

비슷한 것이라면, 그 위기의 원천은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서일 수 있다. 김영명은 한국 민족주의를 저항적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일반적 평가를 거론하면서 저항에는 서구와 일본이라는 대외적 측면과 함께 반체제 저항의 내밀한 측면 두 가지 사실이 함축되었음을 지적한다.<sup>29)</sup>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한국 민족주의의 강한 저항성이 단지 외부의 압력에 대응했던 반작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제의 지배세력이 민족주의를 결여한 비민족주의 또는 반민족주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외적 저항 민족주의의 강렬함이 체제 내부의 과잉 민족주의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재하거나 과소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민족주의의 과잉을 경계하고 이를 무장해제하기 위해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강요함으로써 체제 유지세력의 기득권을 은폐하고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으며, 여전히 사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한국 민족주의는 그 대외적 저항성만큼 대내적 저항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여 대외적 저항 민족주의로서 한국 민족주의는 내면의 허약함으로 인해 실제로 저항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단서일 것이다. 그 역사적 추적은 민족주의가 출현한 근대의 편입과정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각성한 내외적 조건이 한국 민족주의의 대외적 저항성과 대내적 허약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변인이 된다.

한국의 근대, 곧 개항(1876)을 전후로 한 근대 편입은 이른바 문명전환의 시기로 불린다. 그러나 그 시기는 서구 문명과의 조우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 패러다임은 외부의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또는 외부에 의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당대 조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인 동시에 외부의 문제까지 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 채택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물론 내외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 우연일

29) 김영명, 앞의 책, 56쪽.

30) 위의 책, 57-59쪽.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진 내외의 문제가 해결의 접점에서 조우했다는 사실은 내부 전개의 독자적 논리와 외부 전개의 보편적 논리가 역사를 끌어가는 두 가지 동력이라는 일반론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과연 개혁을 전후로 내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일원적 기제(機制)가 존재했을까? 만약 가능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일까? 즉, 한편으로 법제도적·관습적 근거가 전무한 대원군의 집정과 아들인 국왕의 친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라는 내부 문제와 근대 국가건설과 자존을 위해 확대팽창의 모순논리에 빠졌던 일본의 압력이라는 외부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었던 것일까? 더욱이 그에 대한 진지한 응답자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응답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출현했다. 하나는 내부 문제해결이 먼저인가 아니면 외부 위협의 대처가 먼저인가에 대한 선후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내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최선의 해답은 내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그 해결기제가 외부 문제까지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답모색의 구체적 양태도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문명개화(文明開化)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응변(保守應變)이다.

이와 같이 전통과 근대가 각축하고 경쟁했던 당대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일까? 만약 불편부당한 설명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전통과 근대 중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야 할까? 앞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할 경우, 전통과 근대에 대한 평가에서 직면하는 사항은 지식인과 일반대중 간 인식의 괴리이며, 그것은 전통과 근대의 조우와 충돌, 갈등의 과정에서 잉태되었던 한국 민족주의에 내포된 강렬한 개성으로서 저항성과 보편성으로서의 민주성 만큼 이중적이다.<sup>31)</sup>

왜 이중적일까? 물론 전통과 근대, 지식인과 대중, 저항성과 민주성의 이항대립적 구도는 외형상 다른 입장과 맥락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

31) 이황직, 앞의 논문, 109쪽.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문명전환의 시기이자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중적인 결과를 배태했던 우리 자신의 태도와 인식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즉, 개화파에 의해 수용된 문명개화론이 대내적 민주성을 채택하면서 대외적 저항성을 간과함으로써 사대주의의 지속성을, 반면 위정척사파에 의해 분출된 보수응변이 대외적 저항성과 대내적 전제(專制)를 채택함으로써 시대정신을 결여한 수구주의의 잔재를 남긴 것으로 평가하는 이중적인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양자 모두 민족주의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양자의 선택이 한국 민족주의가 지닌 대외적 저항성과 대내적 민주성의 특징을 규정하는 선행조건이자 단순한 수평적 확대로의 의미가 아닌 수직적 심화라는 씨줄과 날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지도 모른다.

## 2. 문명개화론의 씨줄과 날줄: 사대로의 근대와 주체로의 전통

현재의 대중적 이해와 달리 개화파의 등장은 고종의 친정(親政)의지에 기인했다.<sup>32)</sup> 동시에 고종은 개화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종 18년(1881) 무기제조 습득을 위해 69명의 공도를 천진에 파견했던 영선사<sup>33)</sup>와 이어서 신사유람단으로 알려진 암행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명치유신 이후의 국정을 살피게 했다는 기록에서도 고종의 개화외지를 엿볼 수 있다.<sup>34)</sup> 더 나아가 고종은 개화를 위한 논거 역시 상소를 통한 여론을 이용하여 합리화하려고 한다. 당시 유학(幼學) 지식영은 “이제까지 외교라곤 해본 적이 없기에 견문이 넓지 못하여 시국에

32) 개항 직후부터 고종은 기존 신료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수신사로 파견하는 김기수에게 일본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일본의 부국강병에 큰 관심을 표명한다. 1880년에 이르러 고종은 더욱 예리한 대외인식을 갖게 되는데 당시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과 사쓰마번의 정한론이 좌절된 일본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김홍집에게 자세히 보고받고 있다. 이 점에서 고종의 우선적인 관심은 성왕군주로의 성장보다 부국강병을 모색하는 군주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 영선사는 김윤식, 종사관 윤태준, 관변 백낙윤이었다. 『高宗實錄』 18年 9月 26日 乙卯.

34) 어윤중을 대표로 조준영·박정양·엄세영·강문형·조병직·민종묵·이현영·심상학·홍영식·이원희·김용원 등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찰단이었다. 『高宗實錄』 18年 12月 14日 壬申. “本年正月中, 秘命趙準永·林定陽·嚴世永·姜文馨·趙秉稷·閔種默·李憲永·沈相學·洪英植·魚允中等, 前往日本視察, 而名稱以東萊府暗行御史, 故國史只書其復命.”

어둡습니다. 나아가서 교린하거나 연약하는 것이 모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다만 삼가 생각건대, 각국의 인사들이 저작한 『만국공법』, 『조선책략』, 『보법전기』, 『박물신편』, 『격물입문』, 『격치회편』 등의 책 및 우리나라 교리 김옥이 편집한 『기화근사』, 전 승지 박영교가 편찬한 『지구도경』, 진사 안종수가 번역한 『농정신편』, 전 현령 김경수가 기록한 『공보초략』 등의 책은 모두 막힌 소견을 열어주고 시무를 환히 알 수 있게 하는 책들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원(院)을 하나 설치하여 이상의 책들을 수집하고, 또 근래 각국의 수차·농기·직조기·화륜기·병기 등을 구매하여 쌓아놓게 하소서<sup>35)</sup>라고 건의하는데, 고종은 지식영의 건의를 시무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이라며 의정부에 품차하여 시행할 것을 하교한다. 고종 입장에서 그 시행 여부보다 성장하고 있던 신진관료들의 개방적인 사고와 저작들을 공개적으로 정책형성의 청사진으로 참고하여 자신의 의도를 제도와 논거로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와 같은 정책시행은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는 굴욕이 아니라 유교적 왕정실현을 위한 교화(教化)로 개화의 의미를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개화를 위한 명분과 토대를 구축한 다음 단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내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고종 19년(1883) 9월 22일 김옥균은 전격적으로 우부승지로 발령을 받고 연이어 교섭통상사무 참의, 동남개척사, 이조참의, 호조참관 등에 제수되는 등 고종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다. 고종 9년(1872) 알성시 문과급제로 시작한 관직경력으로 볼 때, 32세의 김옥균은 고종이 기획하는 개화의 주도적인 이행자였던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옥균을 위시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모두 고종 9년에 관직을 시작했던 신진관료라는 사실이다. 박영효의 경우 고종 9년 영혜옹주의 부마로 금릉위의 작위를 받으면서 국정 참여자로 모습을 드러낸 후 고종 19년에는 일본수신대사로 파견되었고, 이후 한성부 관윤,

35) 『高宗實錄』 19年 8月 23日 丙子. “從來不曾外交, 故見聞不廣, 昧於時局. 交隣聯約, 俱不知爲何物 [...] 第伏念各國人士所著 萬國公法·朝鮮策略·普法戰紀·博物新編·格物入門·格致彙編等書及我國校理臣金玉均所輯箕和近事·前承旨臣朴泳教所撰地球圖經·進士臣安宗洙所譯農政新編·前縣令臣金景遂所錄公報抄略等書, 皆足以開發拘曲, 瞭解時務者也. 伏願設置一院, 搜集上項諸書, 又購近日各國水車·農器·織組機·火輪機·兵器等貯之.”

광주부유수 등 국왕 가까이에서 관직경력을 쌓아나갔다. 또한 서광범은 고종 17년(1880) 문과급제로 시작해서 19년 한림권점(翰林圈點)을 받았고, 박영효와 함께 일본수신사의 종사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교권점(待敎圈點)을 받아 규장각 대교의 관직을 제수받은 이후 홍영식과 함께 종사관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홍영식 역시 고종 9년 실시된 칠석제(七夕製)에서 유학생(幼學生)의 신분으로 직부전시의 자격을 얻었는데 부친 홍순목의 반대로 바로 관직을 시작하지 않았고, 고종 11년에 대교권점, 한림권점, 본관록과 도당록 권점 등을 받고 홍문관 교리의 경력을 시작으로 고종 20년(1883) 전권부대신의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갑신정변의 장소인 우정총국의 총관에 이르렀다. 가장 어렸던 서재필은 고종 16년(1879)에 급제해서 일본 도미야 사관학교에 수학한 후 사관장(士官長)에 재직 중이었다. 따라서 개화파는 고종의 친정체제 직전 출사하여 개항 이후의 시기에는 정부 내 실무책임자이자 일본과 미국을 경험한 신진관료들이었다.

그렇다면 개화파의 문명개화론은 대외적 압력과 대내적 독자성의 확립이라는 도전과 응전의 교차가 만들어낸 산물일 수 있다. 즉,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내적 독자성의 지표인 민주성의 대중적 수용에 실패하고 외세에 의존했기에 개화파의 문명개화를 사대주의적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는 기존 평가는 개화파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일까? 문명개화의 열망을 이론적으로 가장 명백히 제시한 유길준(兪吉濬)의 인식을 그 논거로 채택해서 살펴보면, 개화파들의 인식과 태도가 사대주의와 민족주의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유길준은 「세계대세론」에서 개화란 “문명을 진기(進起)하여 개화하는 여러 일에 그 뜻을 쓰는 것”<sup>36)</sup>이라는 문명화를 위한 진행과정의 의미로 인식했다. 물론 유길준이 선택한 ‘문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civilization을 유가적 문치의 이상인 ‘준철문명(濬哲文明)’의 개념정의에 기초해서 사용한 것이었다.<sup>37)</sup> 이 점에서 유길준은 근대와 전통을 이항대립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를 보건대 세계 각지와 왕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여러 나라 간에도 서로 교제하고

36)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I』, 「收稅法」(일조각, 1996), 214쪽.

37) 윤대식, 「유길준, 혼돈과 통섭의 경계」, 『한국인물사연구』 19호(2013), 367쪽.

통하는 것이 끊어지고 드물어진 까닭에 문명이 개화하지 못하고 부강이 증진될 수 없었으니 오늘날에야 부진함에 이른 것이 아니요 [...] 오직 그 큰 차이는 오로지 그 교제하고 통하는 넓고 협소함과 많고 적음과 경쟁의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에 있을 따름”<sup>38)</sup>이라고 경쟁을 보편적 원리로 채택하는 동시에 문명개화를 부국강병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설정에 초점을 맞추자면,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적 이상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며, 문명개화 역시 전통적인 유가의 정치관에서도 채택한 방법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아름답고 공적인 이익이 이 도(경쟁)를 통하여 성취되고 천하의 체현되는 실상 또한 이 도로 인하여 보존된다”고 공적 영역의 운영원리로 근대의 경쟁 개념을 수용하는 동시에 “공도를 방해하고 사욕을 좇아 방자해지는 후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도하는 정치교화에 이르는 것”<sup>39)</sup>이라는 부연설명으로부터 개화의 의미가 여전히 교화에 기초한 왕정(王政)의 실현으로 이해되었음을 시사한다.

유길준의 문명개화관이 전통적 정치관의 연장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 이상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길준은 “정치의 틀리고 다름(政治殊異)”으로 현존 정부 형태를 명명하고 권력의 소유 형태에 따라 다인정치와 소인정치로 분류한다. 그 과정에서 군주에 의한 천단정치, 압제정치, 귀족에 의한 사적 전횡 등을 소인정치로, 군주와 인민 모두(君民同治)에 의한 입헌정치와 공화정치를 다인정치로 규정하지만, 권력행사의 주체에 따른 국체와 권력행사의 형태에 따른 정체를 구별할 뿐, 양자의 정합을 선한 정부(good government)로 일괄하지 않는다.

바로 유길준의 정체분류 방식과 이해로부터 서구 정치이론의 이해와 자신의 태생적 정체성을 혼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갈등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사실 “정치의 틀리고 다름”에 소개된 다섯 종류의 정부 형태는 모두 군주와 신민의 관계성을 전제로, ‘누가 무엇을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가?’라는 정의(justice)의 기준을 반영한다. 즉, 통치자의 권력행사가 사적 욕구의 충족인지 공적 가치의 달성인지 여부에 따라 권력행사의 주체와 교차하여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의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38)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IV』, 「競爭論」(일조각, 1996), 55-57쪽.

39)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I』, 「人世的 競勳」(일조각, 1996), 150쪽.

왜냐하면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라는 문제로 좁혔을 경우, 군주에 의한 통치라는 원칙과 소인정치와 다인정치의 비교에 따른 효용성의 경험칙에서 군민동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대와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집합으로서 군민동치를 제시했던 것이며, 그 실질은 왕자(王者)에 의해 여민동락(與民同樂樂)하는 인정(仁政)관이 변용된 셈이다.<sup>40)</sup>

그렇게 보자면 개화파의 실패는 사실상 고종이 친정체제로 진입하면서 불신했던 신료 및 기대했던 근대적 지식인들과의 교합에 실패한 결과일 수 있다. 즉, 고종의 시각이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학구도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자신의 목표가 천단에 의한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이중적 양상을 갖고 있었기에, 근대적 문물을 이해하고 수용한 신진 지식인들조차 군주의 친정이라는 대내적 독자성에서는 전통적인 유가적 성왕론을 그대로 연장하여 근대를 수용함으로써 고종에게도 그리고 일본에게도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대내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근대를 수용한 결과 대외적 저항성의 면역력조차 해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 저항으로서 민족주의는 개화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오해받았으며, 대내적 독자성-민주성으로서 민족주의 역시 전통적인 성왕론의 시대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

#### IV. 민족주의자의 민족과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의 출발?

##### 1. 위정척사론의 씨줄과 날줄: 보수에서 개방으로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의 실패 여부를 둘러싸고 그 실질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과 마찬가지로 위정척사파의 평가 역시 존화양이(尊華攘夷), 복수보형(復讐保形), 무장투쟁과 같은 이념과 실천의 양상에 대해

40) 윤대식, 앞의 논문(2013), 381쪽.

그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중화적 질서를 고수하고 서구화=근대화의 공식을 전면적으로 악(惡)으로 규정한 잘못된 판단 결과 제국주의 침탈에 무력했다는 원죄를 부여하거나 자주독립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했던 도덕적 고결성과 주체성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과연 위정척사파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주의자들이었을까? 아니면 비로소 '민족'에 대한 자각과 민족주의의 정체성을 표출한 고결한 행위주체들이었을까? 위정척사론과 그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단서는 개항부터 일제에 의한 병합에 이르기까지 위정척사파가 시종일관 자신들이 학습한 가치와 세계관에 따라 투쟁과 실천을 진행해나갔던 노정을 재조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위정척사의 출현은 단순히 주지학 일존주의의 전통 속에서 도통의 계승을 자부한 각 학파들이 공통으로 지녔던 정통과 이단에 대한 가치분별 의식이 유학 중심의 동아시아 가치와 서구 가치가 충돌하던 상황에서 드러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sup>41)</sup>

특히 위정척사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의병투쟁을 가장 활발히 전개했던 화서학과(華西學派)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유교 지식인들 중에서 화서학파의 위정척시아말로 대원군 시기 이항로(李恒老)의 척사론으로부터 유인석(柳麟錫)의 무장투쟁을 거쳐 한일병합 즈음 최익현(崔益鉉)의 순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이들 스스로도 투쟁과 실천의 과정에서 좌절되고 굴절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태도와 인식을 바꿀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그들 스스로도 '지켜야 할' 것과 '바뀌야 할' 것의 대상들이 굴절과 좌절의 과정에서 정리되었을 것이다.<sup>42)</sup>

이항로는 고종의 성왕군주 훈육을 위해 당시 좌의정이었던 조두순의 친거로 등용되었다. 그것은 세도정치로 인해 추락한 왕실권위를 회복하려는 대원군의 의지와 정학(正學)숭상이라는 명분하에 별열세력의 안존

41) 박경환, 「동아시아 유학의 근현대 굴절양상」, 『국학연구』 4집(2004), 9쪽.

42) 금장태에 따르면 19세기 조선사회의 변동 속에 도학(道學) 계열의 성리학자들 역시 이론적 기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학파의 분화를 가져왔으며, 외세의 침략과 국가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중 주리론(主理論)의 입장에서 위정과 척사를 실천한 화서학과와 노사학과, 주기론(主氣論)의 입장에서 위정과 척사를 실천한 고산-간재-연재학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화서학과-노사학과가 의병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항전형이 주류였다면, 고산-간재학과는 운전형이 주류였으며, 연재학과는 순절형으로 대조되고 있다.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집(2009), 15-16쪽.

을 위한 세도권문 간 정치적 교집합이었다. 바로 이 교차점에서 위정(衛正)의 목표의식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항로의 최우선적 과제는 성왕으로서 고종의 완성이었으며, 그 결과 고종의 친정(親政)과 대원군의 퇴위(退位)라는 위정의 실천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왜 왕실권위의 회복과 양이의 배척이라는 위정척사의 목표의식을 공유한 대원군을 퇴위시키려 했던 것일까? 그 단서는 이항로의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이기(理氣)를 구별하고 주리(主理)의 입장에서 “이(理)는 부리는 주인이고 기(氣)는 부림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순수해지고 기는 바르게 되어서 만사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안정될 것”<sup>43)</sup>으로 구분하고 주역(主役), 상하(上下)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선후, 준비, 존망의 관계로 위치시켰다.<sup>44)</sup> 이로부터 위정의 논리는 “논사하고 계발하여 성상의 덕을 보도함은 유신에게 맡기시며, 군사를 훈련시켜 무를 닦아 적의 침입과 모욕을 막음은 장수에게 맡기시고, 전곡을 출납하여 군국의 일에 쓰게 함은 유사에게 맡기시며, 효도하는 사람과 청렴한 사람을 추천하고 선비들을 수습하는 것은 도신에게 맡길 것”<sup>45)</sup>을 상소하는 최익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한편 위정=척사의 논리는 “곧 부모에게 효도하던 마음으로 임금에게 충성할 때”<sup>46)</sup>라는 이항로의 권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병자수호조약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국교재개 과정에서 이항로의 문인인 유인석은 척사론의 중심에 놓인다.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고 고국을 버리고 국외에 가서 대의를 지키며 의리를 간직한 채 죽어서 뜻에 따르는 것”<sup>47)</sup>을 담은 유인석의 처변삼사는 적극적인 거의, 곧 의병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소중화(小中華)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적 정체성이 위협받았다는 시대인식, 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동기로 비롯했으며, 이로 인해 척사론은 존화양이, 소양소왜(小洋小倭), 화맥불가단(華脈不可斷)의 단계

43) 『華西集 下』 卷25, 「理氣問答」. “理爲主氣爲役, 則理純氣正, 萬事治而天下安矣.”

44)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척사와 실천」, 『동양정치사상사』 1권 2호(2002), 71쪽.

45) 『勉庵先生文集』 卷3, 「疏」, 〈辭戶曹參判兼陳所懷〉. “立道不惑, 薰陶德性, 責於賢師. 進退百官, 變理陰陽, 責於大臣. 補闕拾遺, 繩愆糾繆, 責於兩司. 論思啓沃, 輔養聖德, 責於儒臣. 鍊兵繕武, 折衝禦侮, 責於帥臣. 出納錢穀, 需用軍國, 責於有司. 選舉孝廉, 收拾士流, 責於道臣.”

46) 『勉庵先生文集』 「附錄」 卷1, 〈年譜〉. “二月春 [···] 李先生教曰, 左右釋褐, 卽移孝事君之日也.”

47) 『昭義新編』 卷2, 「雜錄」. “日學義掃清, 日去之守舊, 日自靖蓬志.”

로 전개되는 화이관적 이분법을 노정했다.

상기한 위정척사파의 인식론과 화이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에게서 정(正)=중화=조선=군주=고종의 보수와 사(邪)=이적=서양=일본=대원군의 배척이라는 명확한 대립구도가 드러나지만, '민족(民族)'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특히 척사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을 모델로 한 문명개화는 예악문물의 정통성을 이탈한 이적으로의 퇴보일 뿐이었다. 더욱이 의병투쟁 과정에서 평민 출신 선봉장인 김백선과 유생 출신 전군장인 안승우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김백선이 안승우를 군법으로 처리하자 유인석이 불경죄로 김백선을 처형한 사건은 의병을 주도한 양반 유생과 의병 대중 간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sup>48)</sup> 결국 위정척사파에게 '보수'해야 할 중화의 가치는 '민족'의 수준을 넘어서는 절대적 상위 가치로의 의미였다.<sup>49)</sup>

정말 위정척사론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일까? 만약 그런 한계를 돌파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사실 중화 대 양이, 즉 조선 대 일본의 대립구도하에서는 일본에 의한 문명개화의 배척이 올바른의 보존이라는 인식이 유지되었고, 강제적인 문명개화에 대한 강제적 대응으로서 무장투쟁은 의병(義兵)으로의 의의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병투쟁의 실패는 일본에 의한 문명개화에 대한 전략적 선회 또는 간과했던 새로운 투쟁요소의 침부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위정척사론에 '민족'의 가치가 내포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즉, 더 이상 중화의 계승자로서 소중화 조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유교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의 의무가 아닌 모두의 의무로 인지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것은 이전 자신들의 중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내포한 '잠들어 있던 유교의 정치관념을 어떻게 일깨워 발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했다.<sup>50)</sup> 결국 위정척사론은 응전을 위한 현실적 변환을 시도한다.

유인석은 “천하의 대세는 진퇴(進退)하고 고금의 대세는 굴신(屈伸)할 따름”<sup>51)</sup>이라는 세계관을 피력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전통적인 순환적

48) 강제인, 「반일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의병전쟁연구 상』 (지식산업사, 1990), 108-109쪽.

49) 윤대식, 앞의 논문(2002), 76쪽.

50) 이황직, 앞의 논문, 124쪽.

51) 『毅菴集』 卷51, 「宇宙問答」. “天下大勢進退而已, 古今大勢屈伸而已.”

역사관을 담보한다. 그런데 유길준도 ‘문명의 진기(進起)’로 개화를 정의하고 문명개화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진퇴굴신(進退屈伸)’의 역사관 역시 과거-현재-미래를 일관하는 역사법칙으로의 정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문명개화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즉, “중국이 망한 후에 사천 년의 화하일맥이 조선에 있게 되고 이천 년 공맹의 남긴 법도가 조선에 있지 않음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소중화의 실상이 확연하다는 것”<sup>52)</sup>이라는 소중화와 “일본이 먼저 깨달았다고 하여 기쁘게 받아들여 개화를 주창하여 온 나라를 바꾸고자 세상을 한번 뒤엎더니 소위 오적·칠적이 나타나 드디어 나라를 내주게 되었다”<sup>53)</sup>는 반개화 = 척왜의 공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와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위정척사의 화이론적 ‘보수’의 서사구조는 변함없는 상태로 ‘개화’의 수용을 위한 담론의 진술이 달라진다.<sup>54)</sup>

그 출발점은 소중화적 질서관의 변용이다. 유인석은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크게 한번 볼 만한 때라는 관망하면서 “지금 동양·서양의 황인종·백인종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들 한다 [...] 여기에서 어떻게 굴신진퇴하는 것인가도 두고 볼 만하다”<sup>55)</sup>는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그것은 중화적 질서관 자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소중화로서 조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정체성이 ‘소중’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로부터 “지금 동양이라고 해도 어찌 다른 나라가 있는가. 다만 중국·조선·일본 등이 있을 따름이다. 삼국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근심해주며 서로 권하고 도와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야 하는 처지”<sup>56)</sup>라는 ‘중국’과 중화적 질서의 틀을 확장하고 있다. 바로 동양삼국의 연대적 발전의 제안이다.

주목할 점은 ‘척왜’의 대상이었던 일본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격상하면서 ‘일본’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본을 기존 중국 중심 문명론의 일원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52) 『毅菴集』 卷51, 「宇宙問答」. “爰自中國陸沉以後，四千年華夏一脈，未嘗不寄寓在朝鮮，二千年魯鄒遺緒未嘗不寄寓在朝鮮矣。此其小中華之實，有的然也。”

53) 『毅菴集』 卷51, 「宇宙問答」. “以日本爲先覺而悅而納之，倡開化而求以易一國，一轉而至所謂五七賊而遂以國交付矣。”

54) 이황직, 앞의 논문, 129-130쪽.

55) 유인석, 「우주문답」, 『나라사랑』 106(외솔회, 2003), 227-228쪽.

56) 위의 책, 228쪽.

유교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일본의 사례로 강화하는 분석이기도 하다.<sup>57)</sup> 따라서 일본과의 연대적 발전 제안은 일본을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자주적인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이자 조선과 일본의 동질성으로 인해서 일본의 자주권만큼이나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양자의 협력이야말로 조선의 독립과 더불어 동양과 세계의 평화로 확대되는 출발점이라는 개방적 인식을 보여준다.<sup>58)</sup>

이제 유인석의 개방적 인식은 조선의 주체로서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주의적 양상을 강화한다. “중국의 요임금 때 조선은 단군이 만들어 어울려 나라가 섰다. [...] 중국과 동방의 시작과 끝이 이와 같으니 그 의리는 진실로 서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sup>59)</sup>는 유인석의 서시는 조선이 단군시대부터 중국과 어울려 대등하게 서로 감응했고 현재에도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으며<sup>60)</sup>, 소중화로서 조선의 정체성을 의무로 규정했던 유교 지식인의 범주를 '민족'의 범주로 확대했다. 결국 위정척사론조차 더 이상 소중화적 질서와 가치의 회복이 현실의 일본을 배제하고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자존을 위한 협력의 대상으로 일본을 포섭하려는 인식의 전환은 자존의 주체로 '민족'을 확대했던 것이다.

## 2. 근대 민족주의론의 씨줄과 날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직조 (織造)

망국과 일제강점기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과 이로부터 해방을,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 독립된 국민국가

57) 유인석의 삼국연대론을 당시 사상계의 한 흐름이었던 동양삼국연대론(범아시아주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당대 동양삼국연대론의 핵심은 기존 중국 중심 문명론에서 탈피하여 일본 중심으로 동양문명을 보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의 침략야욕이 드러난 후 급속히 쇠퇴했다. 반면 유인석의 연대론은 새롭게 출발하는 중국과 강대국화된 일본 두 나라를 조선이 깨우쳐 새로운 중화문명을 건설하자는 내용으로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과 지도적 위치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황직, 앞의 논문, 133쪽.

58)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고려원, 1987), 116-117쪽.

59) 『毅菴集』卷51, 「宇宙問答」. “中國大堯之世, 朝鮮檀君作而竝立. [...] 中東始終, 有如是矣, 義固不可不相依也.”

60) 이황직, 앞의 논문, 142쪽.

건설이었다.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선행조건임에 분명하지만 그 기원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한 설명기제 역시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사실을 재고시킨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식민통치의 저항기제로서 한국 민족주의에 갖는 이중적인 편견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저항성을 폭압적인 식민통치의 대응결과로 이해하지만, 식민통치의 폭압성을 무자비한 폭력과 강압의 행사로만 재단함으로써 민족주의 진영 역시 해외 망명정부의 무장투쟁이나 국내의 비합법적 저항으로 일관했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 동시에 일제 식민당국의 ‘문화정치’가 민족문화의 말살이라는 목표를 내포했고, 민족주의 진영 역시 문화정치의 살기(殺氣)를 방어하기 위해 민족문화 보존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만으로 일제 식민당국과의 타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sup>61)</sup>

정말 그런 것일까? 근대 한국 민족주의 진영은 바로 이전 위정척사에 의해 수용된 민족과 개방성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일까? 더 나아가 왜 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발생했던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삶과 고민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한 이론적·실천적 양상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 해답 중 하나로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여러 지도자들 중 안재홍(安在鴻)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

왜 안재홍을 거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삶이 정치적 삶’이라는 정치철학의 명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조건으로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과 활동적 삶(vita activa)의 정합성을 요구했다. 인간의 삶이 정치적 삶인 이상 인간정신의 부재(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삶의 파괴를 결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

61) 안재홍은 1924년 5월 22일 《시대일보》 사설에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한 것이 이름만 좋은 살기에 싸인 문화정치임을 경고하고, 그 이면의 폭압성에 초점을 맞추어 위장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논박했다(안재홍, 「살기에 싸인 문화정치」,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I』, 지식산업사, 1981, 46쪽. 이하 『선집 I』). 1920년대 문화정치의 공간에서 문화운동과 실력양성운동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비타협적인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로 구별할 수 있으며, 1924년 자치론의 대두를 통해 이에 대한 반대자로서 민족주의 좌파의 비타협성을 찾을 수 있다(박찬승,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 민족주의 좌파의 신간회운동론」, 『한국사연구』 80, 1993, 59-60쪽).

인간정신의 능력에서 사유의 능력은 불멸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 삶은 경험을 관조와 성찰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불멸성을 확보하게 된다.<sup>62)</sup> 따라서 관조적 삶과 활동적 삶의 정합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경우, 안재홍은 역설적으로 완성(完整)한 사상적·실천적 대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 정치과정에서 사라진 민족주의 진영을 대변할 수 있다.

안재홍은 식민통치의 저항수단으로 우선 언론활동을 채택하는데<sup>63)</sup>, 민족·우리·동포의 관념이 명료해진 당시의 '민족'인식을 드러낸다. 안재홍은 일본의 문화정치 전환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 점진적으로 조선인의 의식과 관습을 바꾸는 지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sup>64)</sup>, "우리는 먼저 사위의 형세를 정관하고 다음에는 심각한 자기반성을 하여보자. [...] 그러면 너희 朝鮮人이여! 아니라 우리 同胞諸君이여! 諸君은 지금 무엇을 할까, 우리는 이미 그 軍國的 侵略國民으로서도 惡名을 일세에 펼치지 못하였고 이 換新하는 運頭에 當하여서도 또다시 굶고고 먹 먹는 廉價의 新生活·輕侮할 追隨者가 될까. 우리가 품고 있는 必然한 一條活路는 우리의 피땀, 힘, 마음을 경주하지 않고 멀고 멀은 太陽의 熱과 力을 빌어서 그 주위를 회전하는 작은 위성이 되고 말을까"<sup>65)</sup>라고 주체적인 민족의식의 각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인=동포=우리를 동일한

62)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한길사, 1996), 67쪽.

63) 안재홍의 항일투쟁은 《시대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한 언론활동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1924년 《시대일보》의 정치부장으로 참여하면서 이후 《조선일보》의 주필과 논설위원, 사장으로 이어진 언론활동은 1932년 퇴사할 때까지 안재홍의 항일투쟁이 대중의 계몽과 교육, 그리고 논변을 통한 운동의 성격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 방식이 갖는 의미이다. 이러한 투쟁방식은 두 가지 가정하에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1890년대 시작되었던 항일무장투쟁의 좌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의병활동의 전 과정 중 국내 진공계획이 좌절됨으로써 무장투쟁의 응집력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1910년 자주권의 상실로 투쟁의지와 동원능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일체의 군사적·정치적 투쟁 또는 운동의 진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재홍 개인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는 지사형보다 지사형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그에게 항일투쟁 의지와 독립에 대한 열망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천론적 접근이 직접적인 저항이나 무장투쟁이 아니라 대중계몽과 실력 양성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안재홍은 항일투쟁 수단으로 언론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윤대식, 「안재홍의 항일투쟁론: 언론을 통한 지사적 정치투쟁의 변형과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4집 3호(2004), 2-3쪽.

64) 전상숙, 「1920년대 사이토오 총독의 조선통치관과 '내지 연장주의」, 『담론 201』 11권 2호(2008), 10-15쪽.

65) 안재홍, 「그러면 朝鮮人아 諸君은 이 氣魄이 잇느냐?」, 『선집 1』, 37-38쪽.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론투쟁을 통한 안재홍의 민족주의론이 위정척사의 민족주의론을 계승한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가 조선의 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가 아시아·아프리카의 압박을 통한 발전의 기축이 됨으로써 “현하의 국제적 제 문제가 동방의 제국을 무대로서 회전되는 바 많다 할진대 그는 계급적 의의로서보다도 차라리 국민적 혹은 민족적 문제로서 그러한 것”<sup>66)</sup>으로 진단하는데, 그것은 유인석이 제기했던 제국주의의 압박에 대한 한국의 ‘민족적’ 대응을 명시하고 민족주의의 발현이 자연스러운 응전임을 밝힌 셈이다.

그렇다면 안재홍의 ‘민족적’ 관념으로부터 ‘민족과 ‘민족주의’는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해방 직후 안재홍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동력으로서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를 제창하면서 “民族과 民族意識은 그 유래 매우 오랜 것이니, 근대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 地方的 愛國主義는 지양청산됨을 要하였음과 같이, 근대에 있어 國際的 協同聯關性을 무시하는 孤立排他的인 民族主義 혹은 國家主義는 배격되어야 하겠지만 民族自尊의 生存協同體로서의 주도이념인 民族主義는 거룩하다”<sup>67)</sup>고 구별하는데, 신생 한국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침략주의를 가져온 편협한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민주주의 실현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민족주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안재홍의 민족주의론에 내포된 민주주의와의 일체성은 문명개화론부터 제기되었던 내부적 독자성 획득에 대한 해결 단서도 제공한다. 기존 문명개화론이 취한 개방성이 사대주의로 전락하거나 비판받는 상황은 문명개화론에 내재한 민주성조차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진영의 개방성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앉아서 성공과 실패를 구경만 한다’는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태도로 귀결되었다. 안재홍은 이를 벽상관(壁上觀)으로 비유하고 앞서 언급했던 ‘우리는 먼저 사위의 형세를 정관하고 다음에는 심각한 자기반성을 하여보자’라는 신중함(prudence)의 일관된 태도로써 적극적으로 해방을 강구해야 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실천지표를 제시한다.<sup>68)</sup>

66) 안재홍, 『동방 제국민의 각성』, 『선집 1』, 119쪽.

67)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민우사, 1945), 5-6쪽.

안재홍의 벽상관은 위정척사론이 제기한 중화적 가치와 질서관의 회복이라는 명제와 함께 국제주의적 개방성을 포괄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것은 “중국 문제는 모든 국제 문제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긴절한 관계가 있는 바”<sup>69)</sup>라는 안재홍의 토로처럼 “중국 문제를 좋아하느니보다는 그것이 극동대세의 변전되는 도정에 있어서 관계되는 바 많은 까닭”<sup>70)</sup>이기에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의 동기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동아시아 질서의 과제로, 그리고 세계질서의 과제로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며, 동아시아 질서의 기축인 중국-조선-일본의 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추이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만약 해방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민족주의가 내부적으로 개방성과 국제주의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서도 국제주의적 외부 변인의 내재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여지를 안게 된다. 역사발전의 필연적 단계로서 국민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민족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듯이, 안재홍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조선 현하 사회의 객관조건에 입각하고 구원한 역사와 문화의 전통에서 요약되고 귀납되는 논리적 성과로서 필연 또 당위의 존재”<sup>71)</sup>이기에 신민족주의에 기초한 국민국가야말로 신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한다.<sup>72)</sup>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민족주의=민주주의라는 등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객관적 사회정세와 민족해방의 완성 또는 민족의 민주통일국가 완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 순간의 역사적 단계성은 자못 명백한 사실”<sup>73)</sup>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로이 건설될 국민국가는 식민통치에

68) 안재홍이 1928년 ‘濟南事變의 壁上觀’, 1934년 ‘危難中國의 壁上大觀’, 1935년 ‘歐美戰雲의 冷眼觀’ 등의 논설에서 벽상관, 냉안관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정세를 분석한 것은 국외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의 방관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현실을 좌시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역량부재라는 한계 속에서도 해방이라는 한국의 정치적 과제가 단순히 한국 역사의 독자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편사의 흐름과 맞물려 경위를 이룬다는 판단에 기초한 정치적 실천지(實踐智)로 파악해야 한다.

69) 안재홍, 「危難中國의 壁上大觀」, 『신조선』 7호(1934), 11쪽.

70) 안재홍, 「중국형세와 일본의 지위」, 『선집 I』, 184쪽.

71) 안재홍, 「민주독립과 공영국가」,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II』(지식산업사, 1983), 214-215쪽.

72) 윤대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관」, 『한국사학보』 20집(2005), 295쪽.

73) 안재홍, 앞의 책(1949), 61-63쪽.

의해 와해된 자기 예측과 차별이라는 조건하에서 민족통합과 민주적 운영의 단서를 갖춘 셈이다. 이로부터 안재홍은 한국 민족주의와 한국 민주주의를 일종의 동일성 명제<sup>74)</sup>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해방공간과 건국과정에서 민족주의=민주주의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별개로 작동했던 것일까? 1948년 단독 정부수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에 기초하지만, 그 상황을 민족주의의 완성 또는 실현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안재홍을 포함한 민족주의 진영은 현실정치에서 패배했던 것일까? 안재홍을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은 새로운 국민국가가 '민족적 통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것이야말로 민족주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안재홍은 이념적·정치적 통합의 출발로 민족적 통합을 채택하고 좌우이념 대립과 자본주의·사회주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시의적(時宜的) 대안으로 중도(中道)의 정치노선을 채택했다. 그것은 중앙(中央)의 노선으로 명명되며, "민족해방의 완성과 민족자주독립국가 완성 때문에 진보적인 민족주의 노선에서 협동하자고 하는 것"<sup>75)</sup>으로 협동을 기본원리로 좌우 대립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노선으로 제시되었다.<sup>7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대립과 미소 냉전의 구도하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중앙 또는 중도 노선은 포섭과 융합의 방법이 아니라 중간(中間)의 애매모호한 존재로 정치적 기회주의로 규정됨으로써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축출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민족주의에 계승된 대내적 독자성으로서 민주성은 실종되었으며, 그 시점 이전까지 작동했던 대외적 저항성으로만 동결(凍結)되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한국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은 한국 민족주의론에 내포된 이중적 속성, 즉 대외적 저항성과 대내적 민주성이 직조되어 있는 경위에

74) 김용진, 『정치학방법론서설』(명지사, 1992), 16-18쪽.

75) 안재홍, 앞의 책(1949), 65쪽.

76) 윤대식, 앞의 논문(2005), 300쪽.

기인한다. 즉, 본격적인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출현을 보여주는 근대 편입기부터 문명개화론은 대내적 민주성을 전통적인 성왕론의 변용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들의 군주조차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대외적 개방성조차 사대주의로 오해받았고, 위정척사론은 위정을 척사와 동일한 명제로 채택함으로써 대내적 민주성의 포기가 곧 대외적 개방성의 포기로 오해받아 그들 자신의 현실전환에서 포괄된 주체로서의 민족과 대외적 개방성마저 여전히 저항성만으로 평가받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민족주의 진영으로의 계승과정에서 분출했던 민주성과 개방성 역시 현실정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기회주의로 오해받으며 몰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한국 민족주의는 정치현실에서 사대주의적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될수록 강조되었는데, 체제의 사대주의와 비민주성이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체제유지를 위한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과거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편견에 기초해서 대외적 저항성만으로 잘못 인지된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열린 민족주의로의 변용을 강조했다. 그것은 한국 정치지형에서 재야, 운동권, 반체제 세력의 목소리로서 민중 민족주의만 존재할 뿐, 지배층의 엘리트 민족주의가 박약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sup>77)</sup>

그러나 한국 민족주의는 각 역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근대=문명개화로 인지했던 문명개화=일본화로 인지했던 더 나아가 선독립, 후실력=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꿈꾸었던 간에 민족주의는 그 당시 이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뇌했던 엘리트들의 의무이행을 위한 기제로 작동했다. 동시에 그것은 단순히 지배 엘리트만의 의무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민족의 범주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주체로 포괄해나갔던 민주주의의 확장과 궤를 같이했다는 점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여전한 압력,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배타성·폐쇄성·저항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 혹은 대내적으로 보편성·개방성·다양성·세계성의 부족과 이를 수용하라는 권고 등 ‘열린 민족주의’를 요구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권고와 압력이

---

77) 김영명, 앞의 논문(2012), 21쪽.

타당한 것이라면, 사실상 타당해 보일 뿐이지만, ‘열린 민족주의’를 ‘다양성과 주체성의 공존’으로 접근하는 논리는 한국 민족주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만큼 시사적이다.<sup>78)</sup> 즉,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닫혀 있지도’ 않았고 ‘사대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점진적이거나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이었다. 그들은 역사의 보편성 속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어떻게 병렬시킬 것인지를 고민했기에 문명개화, 위정척사, 민족주의를 선택했다. 물론 그들이 명백히 자신들의 과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면,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 내지 양가적인 시선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실패를 전제로 한국 민족주의에 내포된 이중성이 내부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재단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그들의 실패가 근대와 전통, 다양성과 주체성의 경계에 놓인 결과라고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현재 한국 정치지형에 민족주의가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역사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모습을 대신 변명이라도 해야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

78) 위의 논문, 31쪽.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白虎通義』, 『史記』, 『尙書』, 『爾雅』, 『日知錄』, 『周禮』.  
『高宗實錄』, 『世宗實錄』, 『純宗實錄』.  
『勉庵先生文集』, 『昭義新編』, 『毅菴集』, 『華西集』.  
안재홍, 「危難中國의 壁上大觀」. 『신조선』 7호, 1934.  
\_\_\_\_\_,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우사, 1945.  
\_\_\_\_\_, 『한민족의 기본진로』. 조양사, 1949.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I』. 지식산업사, 1981.  
\_\_\_\_\_, 『민세안재홍선집 II』. 지식산업사, 1983.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I - IV』. 일조각, 1996.

### 2. 2차 자료

- 강재언, 「반일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의병전쟁 연구 상』. 지식산업사, 1990.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집, 2009.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계간 사상』 50호, 2001.  
\_\_\_\_\_,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오름, 2002.  
\_\_\_\_\_, 「우리 정치학 실천의 방안: 문제와 국제정치학의 예」. 『정신문화연구』 26권 1호, 2003.  
\_\_\_\_\_, 「탈민족주의론 비판과 열린 민족주의의 모색」. 『한민족연구』 12호, 2012.  
김웅진, 『정치학방법론서설』. 명지사, 1992.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 고려원, 1987.  
김효전, 「헌법」. 『한국개념사총서』. 소화, 2011.  
마이클 왈저 저, 김용환·박정순·윤형식·정원섭 옮김, 『자유주의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 2001.  
박경환, 「동아시아 유학의 근현대 굴절양상」. 『국학연구』 4집, 2004.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한국개념사총서』, 소화, 2011.  
박찬승, 「1920년대 증반-1930년대 초 민족주의 좌파의 신간회운동론」. 『한국사연구』 80, 1993.  
에드워드 윌슨 저, 최재천·장대익 옮김,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책사와 실천」. 『동양정치사상사』 1권 2호, 2002.  
\_\_\_\_\_, 「안재홍의 항일투쟁론: 언론을 통한 지사적 정치투쟁의 변형과 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4집 3호, 2004.  
\_\_\_\_\_,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관」. 『한국사학보』 20집,

- 2005.
- \_\_\_\_\_, 「유길준, 혼돈과 통섭의 경계」. 『한국인물사연구』 19호, 2013.
- 이용창, 「한말 손병희의 동향과 ‘천도교단재건운동」. 『중앙사학』 15집, 중앙대학교, 2001.
-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 문학과 지성사, 2002.
- 이황직,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1권, 2011.
- 전상숙, 「1920년대 사이토오 총독의 조선통치관과 ‘내지 연장주의」. 『담론 201』 11권 2호, 2008.
- 조기빈 저, 조남호·신정근 옮김, 『반논어』. 예문서원, 1996.
- 최규진, 「러일전쟁 전후 한국인의 러시아 이미지 형성 경로와 러시아 인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19, 경상대학교, 2010.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함동주,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식민론과 식민주의적 문명론」. 『동양사학연구』 94집, 2006.

바이두 [www.baidu.com](http://www.baidu.com)

## 국 문 요약

한국 민족주의는 양가적인 시선을 받고 있으며, 낡고 진부한 폐쇄적 민족주의로 치부되거나 세계화와 통섭의 흐름에 포섭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렬한 저항성과 배타성을 지녔기에 자유 민주주의와 병렬하기 곤란한 이념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편입과정에서 표면으로 들춰냈던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을 추적할 경우, 한국 민족주의의 대외적 저항성은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저항성과 민주성의 적조를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한국 근대사에서 전개되었던 개항-식민지배-해방정국-정부수립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으로 웅진했던 문명개화론-위정척사론-민족주의론을 유길준-유인석-안재홍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논리에 내재한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민족주의는 내부적으로 민주성을, 외부적으로 저항성을 씨줄과 날줄로 하는 이중적 구조로 전개되었지만, 문명개화-위정척사-민족주의 진영 모두 주체적 수용과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접점에서 통섭하지 못하고 경계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민족주의의 대외적 저항성만 부각할 뿐 이에 내재한 민주성을 간과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으며, 현실 정치지형에서 이념과 진영논리가 민족주의를 축출함으로써 한국 민족주의의 고유성이 보편성과 적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민족주의를 위한 그들의 자기변명을 대신하고 한국 정치지형에서 공정한 평가와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투고일** 2013. 3. 25.

**심사일** 2013. 3. 25.

**게재 확정일** 2013. 5. 8.

**주제어(keyword)** 한국 민족주의(Korean Nationalism), 세계화(Globalization), 저항성(resistibility), 민주성(democratic), 문명개화(civilization), 위정척사(rectifying justice and expulsion of wickedness), 유길준(Yoo, Kil-jun), 유인석(Ryu, In-suk), 안재홍(Ahn, Jae-hong)